

브라질 상원의 부패: 장기적 위기의 징후*

마르쿠 아우렐리우 노게이라**

본 논문은 최근의 브라질이 정치적 주관성에 매우 집중된 정치적 위기 상황과 제도적 불안, 다시 말하면 최근의 브라질이 행위 주체와 그들의 사고(思考) 그리고 사회 프로젝트라는 차원에 매우 집중된 정치적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는 점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다 큰 어떤 상황의 반응으로 인식하면서 이 상황을 대변하는 현재의 브라질 상원 위기를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보다 큰 상황은 정부의 결단주의와 사회적 압력이 의회에 가하는 어떤 포위망에서 파생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이 상황이 전반적으로 현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오늘날 입법부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행동할 능력마저 잃게 하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의 정치 시스템들, 더 나아가 의회들은 새로운 글로벌 사회에서 파생된 문화와 사회적 구조들, 다시 말하면 다양하고 파편화된, 자기 성찰적이고 빠른 속도의 폭발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현대 사회와의 효율적인 소통을 할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핵심어: parlamento/ corrupção/ globalización/ República/ Brasil; 의회/ 세계화/ 정당/ 공화국

비록 모든 것이 휴전 상태로 끝나버렸기는 했어도 브라질 상원의 핵심부를 강타하며 대통령궁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그 위기를 냉정히 분석해보면, 그것이 단지 상대적인 일시적 중단상태에 머물고 있을 뿐이라는 걸 알게 된다. 즉, 위기는 해결되기는커녕 휴전상태에 빠져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위기를 조장했던 여러 제도적 요인들을 비롯하여 상원의 각종 규정과 주체는 아직 난공불락의 성역으로 남아 있다. 그 결과, 위기의 근원에 있었던 상황과는 질적으로 다른, 어떤 상황이 조만간 야기될 수 있다는 징후들이 단지 지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현재의 상황은 역설적이다.

최소한 단기간 내에는, 브라질 정치 시스템을 전염시킨 유독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기에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 어떤 해결책이 등장하기란 힘든 상황이다. 그 유독성 물질들 가운데 몇몇은 오랜 역사적 시간을 두고 생성된 것이어서

* 본 논문의 첫 버전은 상파울루대학교 고등문제연구소(Instituto de Estudos Avançados)의 리뷰 Estudos Avançados 제 67호에 게재되었다.

** 상파울루 주립대학교(UNESP) 정치학 정교수(아라라파라 캠퍼스)

이미 브라질 사회와 정치의 저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우발적으로 ‘좋은 의원들 그룹’—그 존재 여부는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이 주도세력으로 성장하여 윤리적, 정치적, 제도적 부활을 시도할 가능성은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원의 기력 소모—그리고 결과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의회, 정당들의 이미지 훼손—가 얼마나 컸던지 거의 꺾이기만 남은 지경에 이르렀다. 그 결과, 상원은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하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비록 이러한 관점을 증명할 증거들이 모두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누적된 잔해의 한 가운데에 새로운 의제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징조들이 엿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사회가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주 벼랑으로 내몰릴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브라질 역사는 매우 다양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1964년 군부독재가 극도의 야만성을 드러내면서 독단으로 치달았을 때, 브라질 국민은 비로소 긴장완화라는 화두를 꺼내들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민주화 과정 역시 여유를 가지면서 조금씩 브라질 사회 전체에 큰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또한, 1985년 연간 인플레이션이 230%에 달했을 때, *끄루자두 계획(Plano Cruzado)*과 함께 화폐안정화를 위한 모든 기술적·정치적 노력들이 경주되었고, 그 결과 몇 년 뒤에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나아가 부패와 사기성 짙은 밀거래 그리고 권력에 빌붙어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이 서로 뒤범벅되며 만들어진 진흙탕 물이 대통령 궁의 빈틈으로 스며들어 1992년 공화국대통령의 탄핵을 야기하였고, 그것이 브라질의 새로운 정치 시대를 여는 출발점으로 작용하였었다.

물론 이러한 점을 인정하는 것이 강력한 힘을 지닌 어떤 객관적인 법의 존재를 인정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사실들의 전개 논리 속에, 어떤 가능성 속에 내재된, 어떤 경향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 브라질의 최근 역사에서는 심각한 순간들이 존재했으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때까지도 그러한 문제점들은 극복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05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부패스캔들의 위기를 상기해보자. 그 사건은 대통령과 국가의 정치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룰라가 재선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게다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관계에 끼어들어 혼란을 야기했던

악습들도 제거되지 못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모두가 무사히 빠져나간 것은 아니었다. 마법이 풀리듯, 최소한 한 정당은 고난의 길로 접어들어 초심으로 돌아가야 했다.

미래에 2009년은, 최근 브라질 정치사에서 두드러지게 반복되었던 여러 상황의 ‘탕아’로 비춰질 수 있다. 룰라는, 2009년 초 84%에 달했던 지지도를 이끌어낸, 자신의 스타일을 보다 강화했다. 정당들과는 달리 대중에게 직접 뛰어드는 그의 행동 스타일과, 연방정부와 지방 정부들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는 그의 노력은 두 차례에 걸친 자기 임기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룰라의 이러한 노력은 전략으로서의 공공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저변에는 유혹적이고도 가부장적인 언술 등을 통해 향후 다가오는 대선 of the 길을 약삭빠르게 닦아 두고자한 그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비록 그것들이 ‘민중주의’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과 조정 장치가 부족한 나라에 필수 요소인 제도의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그것이 정부의 일상이 되었다.

룰라가 정치를 하는 방식은 상당 부분 브라질의 얼굴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의 정치 방식은 브라질 역사와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정치 패턴을 보여줌과 동시에 또 재생산을 하고 있다. 정치학자인 루이즈 베르네기 비안나(Luiz Werneck Vianna)가 자주 말하듯이, 그것은 브라질 국민 국가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현재도 하고 있는 일종의 ‘따뜻한 우정(cordiality)’이라는 요소가 현실 속에 구현된 것이었다.

2009년 내내 야당(브라질 사회 민주당 PSDB, 민주당 DEM)은 2010년 대선의 사전 선거운동으로 본 모든 것을 포착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하려 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활동의 중심축으로 선택했다. 하지만 그 중심축을 운영함에 있어서 야당은 초보였고, 비효율적이었다. 오히려 최악의 재앙을 반복했을 뿐이었다. 집정자로 하여금 정치를 그만두라고 하고, 또 그 집정자더러 자신의 행위를 통해 선거차원의 어떤 이득을 보려는 것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야당이란 여당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일이다. 그들의 고발은 단지 룰라의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의 부가적인 표현일 뿐이었다. 룰라는 야당이 자신의 모습을 추스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다.

룰라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야당의 나약함은 효율적인 민주주의와 개혁 그리고 사회적 재조직을 구현함에 있어서 브라질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대변한다. 자신의 이미지와 역할이 공개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의회와 정적들 간의 일시적인 관계가 아직 지속되는 것은 단기간의 이해관계를 최대화하고자 하는 정치인들과 정당들의 어쩔 수 없는 노력에서 촉발된 하나의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궁의 저급한 인기몰이 행위가 톨라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에서 호기를 만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스타일의 리더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즉각적인 혜택에 연연하지 않은 채 브라질 사회에 하나의 옵션으로 등장할 만큼 아주 현명하고 단결력이 있는, 용기 있는 민주적 야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브라질이 각종 딜레마와 패러독스 그리고 의문점들로 점철된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해도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닐 것이다. 현재 브라질에는 마키아벨리 스타일의 어떤 군주(집정자)도 없으며,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했던 “현대적인 군주들”, 즉 어떤 사회적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과 생각들을 조직화하는데 헌신할 정당들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상원의 위기는 그러한 상황의 명확한 반영이며, 확실하고도 상징적인 디테일일 뿐이다. 어쨌든 디테일뿐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I. 현실주의의 문제

현 위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위기를 다루는데 있어서 브라질 정치인들이 수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 위기의 확산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국민과 여론의 기대에는 귀머거리 행세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일종의 ‘의회 협동주의’에 감염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상황의 틈새에서 몇몇 산발적인 분노와 울분 그리고 일반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만이 있었을 뿐이다.

브라질 정치 시스템의 황금 열쇠로 간주되던 상원이 어떻게 만인이 보는 앞에 피를 흘리며 운명에 내맡겨진 채 붕 떠있는 상태로 있을 수 있을까? 상원은 자신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 속에서 정부와 정치의 관행을 뜯어고치지 못한 채 영광과 존경심마저 잃어버리고 말 것인가? 또한, 특권의 상실과 그에 따른 자신들의 임기 문제마저 아랑곳 하지 않는 것 같은 상원의원들의 자긍심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상원의 위기는 눈에 확연히 띄는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 위기는 상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위기’라는 단어를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 위기의 폭을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 우리는 어떤 정치적 파멸의 최종 상황에 직면해있거나 그 시발점에 놓여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우리는 국가를 전면적으로 강타할 어떤 ‘유기적 위기’ 앞에 직면한 것도 아니고, 일명 ‘헤게모니의 위기’라는 상황에 직면해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상황 앞에서는 그 어떤 오리엔테이션이나 도덕적 개념도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위기에 대하여 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도권이 사회의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웃음거리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상원의원인 주제 사르네이나 이런 저런 정당 또는 입법부 자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스스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인기와 그의 통치 업적이 무게를 더하고 있는 공화국 대통령실 조차 이제는 더 이상 만족스럽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

만일 우리가 ‘위기’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면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현재 브라질에는 심각한 정치적·제도적 불안이 존재한다는 말로 대체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수십 년간 쌓아온 주제 사르네이 상원의장의 정치적 생명이 어떤 함정에 빠져들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이 현 상황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해서 어떤 부패나 공적 자금에 대한 관리 부실 혹은 족벌주의의 문제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상원의장이라는 직책이 갖는 도덕적 권위의 추락이 상원 전체로 퍼져 입법부에서 행정부까지, 여타 모든 정치 기관들에게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얼핏 보기에 진정된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여겨지고 있지만, 작금의 위기는 브라질의 제도적 근간과 정치 판도가 은밀하고도 추하게 물들어가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시스템이 이미 반응을 했을 것이다. 즉, 시스템이 자기 자신의 나약해짐을 수동적으로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우려스럽다. 만일 정치 시스템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나라가 그 시스템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그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일까?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돌아오고 사악하고도 짜증나는 침묵 속에서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제도가 잘 가동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절벽에서 추락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혹시 정치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하는데 있어서조차도 현 제도가 무용지물로, 신경질이 날 정도로 ‘기능적’인 그 무엇으로 변해버린 것은 아닐까?

상원은 브라질의 제도적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다. 그에게는 하원의 우발적인 실수나 ‘압력들을 차단하는 역할이 부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성에 균형을 유지하고 공화국을 위대한 나라로 탈바꿈시킬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하지만 작금의 상원은 아직까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상원이 잘 가동되든 그렇지 않든, 상원이 갖는 제도로서의 역할은 절름발이 상태이며, 적지 않은 심각한 무능력상태에 빠져 있다. 제도로서의 역할이 무너지자, 그 뒤를 이어 저속함과 공허함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상황이 그보다 더 악화되고 있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러한 순간에 보다 나은 상황이 등장하여 그 책임을 떠안을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이자, 그의 정치적 핵심 지지 정당인 노동자당(PT)의 수장인 대통령에 대하여 하나의 의문점이 남아있다. 즉, 왜 그가 상원의장을 비호하면서 현 위기가 별 것이 아닌 듯 치부하는 길을 택한 것인가? 대답은 간단하다. 대통령의 행위에 내재해온 ‘정치적 현실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상원 의장을 에워싸는 그의 행위는 (브라질의 최대 정당이자 상원의장이 소속되어 있는 -역주) 브라질민주운동당(PMDB)과의 연정을 유지함과 동시에 야당이 상원을 장악하는 걸 피하기 위함이었다. 앞서 언급한 현 대통령의 ‘정치적 현실주의’를 눈여겨보면 이러한 대답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러나 그러한 대답은 상원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이며, 국가의 정치사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그의 태도는 현 상황을 안정시키지도 못하고 개선시키지도 못하며, 현재 국가가 안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나아가 그의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0년 대선에서 그가 지지하고 있는 후보의 입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실주의는 정치에서 소중한 것이다. 그 세계에서는 빛이 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금은 아니라든가, 항상 훌륭한 사람들이 올바르게 제대로 된 일을 해내는 것은 아니라든가, 또는 악이 항상 악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가 지배한다. 이미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대해 쓴 유명한 글에서 이 점을 말했었다. 그리고 ‘정치에서 증거가 반드시 사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주제 사르네이 상원의원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당의 욕심이 있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나아가 대통령과 주제 사르네이 그리고 그가 속한 정당 간에 피로 쓴 모종의 협약이 존재하는 이상, 야당들이 주제 사르네이가 퇴진할 경우 혜택을 보리라는 것 역시 예상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야당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현 정부로 하여금 자신이 전체 사회를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현 상황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민주적인 정부가 꼭 필요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야당들은 상원의 위기를 다가오는 선거에서의 유리한 고지 점령을 위해, 그리고 2010 대선에서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이용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은 현 정부가 상원을 비호함으로써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은 채 무사히 빠져나갈 거라고 믿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다.

어떤 현실주의도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성격을 부여하는 전통과 지나치게 충돌해서도 안 되고, 또 그 전통을 파괴하는 죄를 범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이나 충성도 등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초지일관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려는 정당과 정치인들은 이러한 상황과 맞붙어 싸울 필요가 있다. 최소한 자신들의 역사적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이를 통해 정치에 보다 강력한 윤리적 힘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게다가, 그 어떤 현실주의도 민주적인 여론과 상식 혹은 길거리의 목소리가 기대하는 바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러한 것에 굴욕적으로 복종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을 무시할 방법도 없거니와, 그럴 경우 현실주의를 외면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된다. 그것은 교감의 문제이다.

II. 포위된 의회

일시적이거나 앞의 역설에 동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역설은 사악하면서도 우려를 자아내는 것이다. 문제는, 오늘날의 민주주의란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입법부가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부의 힘과 그 행정부가 주도하는 결단주의(decisionism)의 힘은 참여와 직접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로운 사회적 활동을 위한 압력이 증가하는 만큼 커지게 마련이다. 오늘날 의회는

정부의 결단주의와 사회적 자발성 사이에 끼여 스스로의 축을 잃어버린 듯하다(Nogueira, 2005).

거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현대 의회는 ‘어느 정도’ 복잡한 현 사회에서 국가의 정치 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국민국가의 제도이다. 세계화 된 초국가적 사회이자 초자본주의적이며 또 극도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현 세계는 국민국가를 초월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비록 국민국가를 제거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또한, 세계를 하나로 묶으면서도 세계국가 개념을 수반하지 않는 하나의 세계사회이다. 나아가 ‘고단위로’ 복잡한 사회의 출현과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세계사회로 그 모습이 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 시스템들(의회, 정당, 정치계급, 정부)은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의 상황이 그 ‘세계적인 정보사회’의 형성과 세계화의 여파 그리고 국민국가의 주권 축소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정치 시스템들은 글로벌화 된 사회의 새로운 규범에서 유래되는 사회구조들과 문화, 즉 다양하고 파편화되었으며, 자기 성찰적이고 또 폭발적인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그 사회와의 효율적인 상호작용 능력이 줄어들면서 더욱 혼란스럽게 변화하였다. 사실 ‘고단위로’ 복잡한 조건 속에서 모든 중심은 방향제시의 능력과 활동 능력을 잃어가는 경향이 있다(Nogueira, 2004).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다. 특히, 주변지역이라는 자신의 조건에서 유래되는 고통을 완화시키지 못한 채 근대화를 급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그런 현상이 더욱 심각하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하이퍼 모던 국가들이자 주변국들이다. 그들은 두 개의 존재론적인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 자신들을 급진적으로 근대화 하면서 기술과 정보 그리고 시장과 경쟁에 몸을 내맡기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빠른 속도로 변하면서 다양화되고 파편화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국이라는 조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종속적이고 불평등하며 내적으로 산산이 부서져있다. 이 지역 국가들은 불완전한 시민의 자격이라는 특징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채널들에 의해 전파된 민주적인 정치문화도 없고 또 스스로 완전해질 수도 없는 하나의 민주주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써 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여론의 이미지는 아주 부정적이다. 정치 시스템의 ‘하이퍼 기능성’에 대한 반발로써 오늘날 시민들은 정치참여(정당에 대한 충실성, 정부의 정통성, 선거에 대한 열정) 대신에 윤리적인 분노를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현재의 정치(제도화된 정치, 시스템의 정치)는 그 형식이 변하였고, 이제는 사람들의 우선적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나친’ 사회적 요구와 굳튼 정치 시스템을 하나의 전체로 보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행정부의 결단주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행정부의 결단주의는 대의정치 시스템(무엇보다도 선거차원에서) 내부에 존재하는 ‘비이성적인 일들’의 여파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계급의 나약함과 기술적인 미비의 여파를 더 악화시키고 있으며, 시민적 차원의 정치를 공허하게 만드는 대형 이벤트형의 정치 여파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오늘날 입법부는 정치적·사회적 줄다리기에서 반복되는 자신의 전략적 포지션을 지켜보면서, 현대 사회 자체의 재구성 과정에서 오는, 즉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회 속에 자신을 모습을 드러내는 행위로부터 유래되는 일련의 복잡한 압력과 도전에 얽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입법부는 각종 요구가 가득한 ‘망’이 되었으며, 그 주변에는 조직과 기능, 역할이라는 복잡한 문제들이 에워싸고 있다. 흔히 말하여, 오늘날의 입법부는 전방위로 포위된 하나의 제도이다.

입법부는 현대의 민주적, 사회적 현실 속에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비록 자신의 기본적인 기능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하더라도 세계화와 ‘정보 사회’를 추구하는 광대한 사회적 변화와 민주주의의 변화에 완전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근대성이 ‘고체화’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액체화’ 되었다하더라도(Bauman), 그리고 ‘유동의 권력’이 ‘권력의 유동’ 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하더라도, 또한 사회가 복잡하고 자기 성찰적으로 변했다하더라도(Giddens), 정치 제도들이 정체성 위기를 겪거나 잘 기능하지 못하는 위기를 보인다하더라도 그렇게 놀랄 필요가 없다.

입법부는 현 사회와 시민사회 그리고 시장과 국가의 각종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압력과 추궁, 요구들에 적응하고 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것이 입법부의 역할 수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문제성이 짙고 전략적 성격이 강한 주제와 맞닥뜨릴 경우, 입법부는 꼼짝도 못하는 포화상태가 되는 것 같다. 그렇다고 기능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중요한 역할 수행을 포기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느라 ‘고통을 겪고 있다.’

입법부를 둘러싸고 있는 불안과 힘의 소모는 사회적 차별화를 증대시키고

이해관계를 심화시키는 심대한 사회적 변화에서 유래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겪고 있는 여러 변화에서도 유래된다. 우리는 지금 정당과 유권자의 충성도에 바탕을 둔 고전적인 대의 민주주의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대의 민주주의로 옮겨가고 있다. 그 새로운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공중(public)’이 주요 역할을 한다(Manin, 1996). 그 역할이란 다름이 아니라 개인 중심이 ‘대중 mass’의 중심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그들의 대표들(의원들)의 계획은 참여 메커니즘과 조합적 압력들 그리고 미디어에 의해 결정된다. 유권자들 역시 보다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더 가변적인 존재로 변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자신의 의견을 바꾼다 —그들은 과거보다 정치인들에게 덜 충실하다. 이에 입법부는 사회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그 사회와 교감하며 움직이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입법제도의 긍정적인 기능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의회의 긍정적인 정치적 기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민주주의는 전형적인 절차나 시스템의 관점에서든(행정부와의 관계, 내부조직의 형태, 규정상의 절차 등), 인적 자원의 자질 차원에서든 입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조건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의원 보좌관과 입법 관련 부서의 직원뿐만 아니라 의원 자신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그들 역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제 본 글에서 암시하고자하는, 제도 개혁의 기본 내용이나 가정들로서 기능하게 될, 두 가지 일반 대책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입법부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보좌관들까지 전체 구성원의 실무적, 지적, 정치 윤리적 자질 향상의 폭을 확대함과 동시에 이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입법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업데이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의 인적자원과 정보를 보다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입법부가 훌륭하고 유능한 ‘정치 계급’만큼이나 필요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업무에 적절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지속적이고도 준비가 잘 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 이것은 인력 선발 메커니즘으로써의 정당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역할에 보다 나은 질을 제공한다는 걸 의미한다.

둘째, 입법부의 완전한 위상 회복은 정치 시스템 개혁을 어떻게 구상하고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 그 개혁이 민주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면 질수록 —그 개혁이 시민사회와 다수의 이해관계에 개방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입법부의 가치는 올라갈 것이고, 또 현 사회에서 자신의 위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되찾게 될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정부기관들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국가 개혁 전략이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어쨌든 입법부의 문제는 입법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하나의 전체로서 연루되기 때문이다.

‘좋은’ 의회의 존재 여부는 좋은 정보와 좋은 지식, 즉 자료의 생산과 관리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분석과 해법에 달려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의 자기 이해와 시민들의 의혹 해소를 촉진할 실무적·지적 작업이 필요하다. 제도 개혁에 있어서의 명료함과 의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정치 시스템이 보다 큰 비판적 사고를 수용할 때 가능하다.

III. 텅 빈 정당들

현재 브라질 의회를 갉아먹고 있는 문제점 —공교롭게도 현대 의회 그 자체— 은 분명, 정치 시스템의 핵심 주체 중 하나인, 정당에 있다.

상원의 위기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2009년 중반에 최고선거법원(TSE)이 브라질 정당들에 대해 실시한 한 연구조사를 발표했다. 그 내용이 중요한 만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8년 1월에 브라질 유권자의 90% 가량은 그 어떤 정당과도 형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 일 년 뒤 이 수치는 91.6%로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약 1억 1,970만 명의 유권자가 이러한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기간에 브라질 유권자가 약 290여만 명 늘어난 것과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수가 430만 여명 증가하였음을 감안하면, 두 수치의 비교 결과는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경향은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에 타격을 입히고 있으며, 실제로 모든 정당의 지구당 단위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일한 예외는 ‘보편교회 하느님의 왕국(Igreja Universal do Reino de Deus, IURD: 1977년 브라질에서 탄생한 오순절파의 일종으로 영어로는 Universal Church of the Kingdom of God으로 알려져 있음 -역주)’과 가까운

브라질공화당(PRB)이었는데, 동 기간에 이 정당의 당원은 121만 명에서 157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 외에 브라질 최대 정당인 브라질민주운동당(PMDB)은 이 기간에 약 30여만 명에 이르는 14%의 당원이 탈당했으며, 이와 같은 수치는 브라질사회민주당(PSDB), 민주당(DEM), 노동자당(PT)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게다가, 사회주의 통일 노동자당(PSTU)과 공장근로자당(PCO)과 같은 군소정당도 약 3%의 당원 이탈을 경험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당들이 유권자들을 실망시키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유권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추구할 새로운 방식을 찾아낸 것일까? 문제는 제도적이므로 지금 보다 더 정의롭고 적절한 법령을 제정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극우로부터 극좌에 이르는 다양한 여론의 복잡한 흐름이 말해주듯이,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인들의 이미지를 훼손시킨 ‘과다한 부패’와 ‘높은 봉급’에서 나온 도덕의 문제일까? 사실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면 멋진 비판 사회이론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까?

최종 답안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한 연결고리의 부재가 주는 정치적 충격을 겉으로 드러내기란 쉬운 일이다. 정당과 유권자들 사이의 관계가 약화된 것은 사회와 정치 시스템 간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졌다는 징후다. 시민들이 더 이상 자신들이 어떻게 통치되는가에 대해 개의치 않으며, 그로 인하여 대의 민주주의와 그 구조에 속하는 모든 정치인들을 멀리하기로 작심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시민이 없는 대표성은 슬프기 짝이 없으며, 결국 스스로의 규칙과 결과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유일한 주인공인 정당들의 독점적 지배하에 놓이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의 정치는 사회에 의해 ‘보여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의 정치를 무대의 중앙으로 가져가는 문제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 전문가들의 활동으로 변질될 것이다.

이 문제가 복잡한 이유는 대의 민주주의가 현재의 우리 사회만큼이나 복잡하고 다민족적인 사회에서 항상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의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정치와 사회적 요구 그리고 통치의 결정에 가동성을 부여하는 근본적인 역할이란, 바로 이러한 경우를 위해 만들어진, 정당들에게 있다.

정당들은 정권창출에 전력투구를 하거나 아니면 야당에서 여당으로 변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들은 이런 저런 사회계급의 부분적인 이해관계가 여타 사회계급의 부분적인 이해관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전체를 보다 충실하게 대변할 어떤 공통분모를 끌어내기 위하여 여러 조건들

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언제나 자신들의 활동을 의회의 좁은 공간에 한정시키기를 거부하는 좌익 조직들조차도 일련의 사회 그룹을 대변한다. 그리하여 그 그룹에게 목소리를 부여하면서 헤게모니의 구축자로서 그리고 새로운 문화적 오리엔테이션의 구축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정당과 의회 안팎에서 벌어지는 그들 사이의 싸움이 각종 요구사항들을 민주적으로 처리하게 하고 나아가 정책의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만일 시민들이 그들을 무시하면, 경고의 신호음이 울린다. 사회가 스스로를 대변하는 기회가 부족하거나 또는 ‘직접 참여’를 통해 자신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기회가 전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 경고음은 더욱 요란하게 울린다.

이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영위하는 삶의 존재 방식을 살펴보아야 한다. 정당이 텅 비어버리는 것은 사회 질서를 흔들고 있는 현재의 깊은 변화와 관계가 있다. 지그문트 바우만(Zigmunt Bauman)과 같은 몇몇 사회학자들은 그 문제를 언급함에 있어서 ‘액체적 삶’이라고 하는 은유를 종종 사용한다. 그는 ‘고체적’이고 제도화된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고전적인 ‘용해’과정의 가속화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에 따른 결과로써 불확실성과 불안이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 욕구를 누그러뜨리는 경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마누엘 카스텔(Manuel Castells)와 같은 다른 학자들의 경우는 ‘네트워크 사회’를 언급한다. 그들은 일상의 한 부분이 되면서 커뮤니케이션과 업무 그리고 의식의 형성에 변화를 야기하는 정보 기술에 관심을 둔다. 그들은 경제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에 중첩되는 역학 속에서 결정의 흐름을 혼란시키는 ‘네트워크 사회’란, 중심들(정부, 국가, 정당)로 하여금 힘을 잃게 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실망하여 무관심해진 공간과 사람들을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시대의 전형적인 개인화, 민주화와 결합되어 개인들을 기존 그룹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도록 부추긴다. 다시 말하면, 그 개인들이 미디어나 일부 사회 그룹들 혹은 시장에 의해 결정된 패턴을 추종한다고는 해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부추긴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통제에서 벗어난 듯한 분위기 속에서 사악하고도 은밀한 통제 형태들이 확산된다. (인간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집착은 역설적으로 자유에 대한 그의 무한한 욕망과 공존한다. 인간은 사실 거의 아무 것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더 많은 통제를 갈구한다.

이처럼 사회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가담과 충성을 포기함으로써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있다. 이것이 정치에 어떻게 반영될 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가정들을 끈이끈대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사회의 변화는 비대칭적이며, 긴 세월을 통해 확산되기 때문에 제도에 의해 포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그러한 설명들이 어느 정도 유용하다면, 그것은 사회 저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종을 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제도들이 변할 필요가 있으며, 관례가 지속적으로 일상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나아가 정치적 언술행위 역시, 신념이나 책 혹은 정치영웅들과는 별도로, 매일 매일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민주정치란 신의 영역에서 벗어나 세속으로 파고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혹시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역사의 언어를 말하지 않는 신들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정치는 자신의 가치를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IV. 공화국 문제

현 정치 위기의 확산과 심각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지표가 또 하나 있다. 2009년 3월 13일 브라질 공화국의 3부 대표들이 서명한 “보다 손쉽게 접근 가능하고 민첩하며 효율적인 정의 시스템 구현을 위한 국가 협약 II”가 그것이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을 비롯하여 연방최고법원장, 상원의장, 하원의장이 6쪽에 달하는 이 문서를 통해 정의에 대한 만인의 손쉬운 접근, 민첩한 법률 서비스 그리고 기본 인권 보호 계획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승인을 얻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협약은 국민의 큰 지지를 얻지 못했고, 정치의제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협약이란 싸움의 중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방어의 약속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협약이란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의무도 없고 또 똑같은 개별적 이해관계도 없는 두 개 이상의 पार्ट들이 현재 위협을 받고 있는 공동 목표라는 이름으로 모두에게 공통되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하자는 하나의 제안을 의미한다. 나아가 협약이란 또 상호 협력을 요구함과 동시에 하나의 대의명분, 하나의

원칙 혹은 하나의 제도에 충실하자는 결의를 의미한다.

만일 공화국 차원의 어떤 협약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공화국이, 꼭 혼란에 빠질 위험은 아닐지라도, 어떤 위험을 겪고 있음을 가정한 것이다. 예를 들면, 격에 맞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불편한 것들을 지나치게 많이 양산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그러한 협약의 한 가운데에 정의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현재에 존재하는 시스템이 나쁘다거나, 잘 가동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사회에 약속한 것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그와 같은 협약이 시스템을 보다 민주적이고 민첩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만들겠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현재의 시스템이 시민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리에 있지 않다거나, 더디거나, 아니면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협약문서가 암시하듯이, 만일 무언가가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있다면, 진정 우리는 어떤 복잡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며, 그 위기는 국가의 윤리적 바탕과 제도적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실제로 그 위기는 기본 인권과, 모두에게 평등한 법과 정의로 살아 움직이는 공화국 체제의 심장부를 위협하고 있다.

그 협약에 서명한 사람들이 선결과제로 정한 리스트를 보면 매우 심각하다. 예를 들어, 그 리스트는 형법에 대한 우려를 포함하여 범죄수사와 그에 따른 재판, 구속, 가석방, 전화도청에 대한 기준 그리고 수사에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장비의 사용 등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일반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필요이상의 무엇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 협약은 조직범죄와 돈 세탁 관련법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갱단 혹은 민간 군사조직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의 개정을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 그 협약에는 권력의 남용 문제를 비롯하여 우발적인 인권침해에 있어서의 공직자들의 책임에 대한 우려도 표명되어 있으며, 법무부의 ‘희생자와 증인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과, 노동관계 보호 장치들을 확대하기 위한 노동 관련법의 개선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동 문건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상황은 거의 재앙 수준이다. 문건에 따르면, 3부 간의 약속은 지우마르 멘지스(Gilmar Mendes) 연방최고법원장의 논리를 옹호하고 있다. 지우마르 멘지스는 브라질 내부에 ‘경찰국가’가 존재하는데 그 경찰국가란, 까스텔루 지 아레이아 이 사치아그라아(Castelo

de Arcía e Satiagraha) 사건처럼, 연방경찰이 여러 작전에서 저질렀을 오버행위에서 엿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그 ‘과다행위’에는 은행가와 기업인, 경찰서장, 정치인, 공직자들도 연루되어 있어서 공포를 자아낸다.

이러한 형태의 협약은 부정할 수 없는 상징성을 지닌다. 그런 류의 협약이 갖는 목적은 어떤 행동 전략을 제안하거나 수립하고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만일의 경우에 있어서 어떤 움직임이나 행동계획을 리드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협약 속에는 많은 게임이 숨어있다. 즉, 공화국 협약을 국가의 최고위층 사이에 이루어진 모종의 ‘정산(定算)’ 도구로 보아도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협약이 연방경찰 내부에 ‘쓸모없는’ 것들을 제거하거나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관계 개선에 일조할지도 모른다. 또한, 그 협약이 행정국가나 정치국가에 대한 법치국가의 우월성을 옹호하기 위해 혹은 누군가가 정의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드러내기 위해 어떤 밑줄에서 구체화될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것들은 분쟁과 분열 그리고 긴장이 정치의 장을 넘어 보다 엄격하고 균형 잡힌 요란한 재판의 장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있어서 그다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듯 정치의 법제화를 의미한다.

협약을 분석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공화국을 수호하고 또 공화국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한 작전이 3부의 주인행세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상기해보면 된다. 국가를 통치하고 조직하기 위한 공화제적 방식이란, 공공이익이 개인의 이해관계와 구분되어야 하고, 권리와 법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하며, 또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있다. 나아가 그 방식은 3부가 경계를 늦추지 않고 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3부는 단지 훌륭한 정치인들이 존재할 때,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시민적 차원의 교육이 잘 진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의미가 있고, 또 존속할 수 있다. 나아가 시민들이 이해하고 지지하는 제도와 공적인 관례에 의해 조직되고 통치되는 사회가 진정한 공화정적인 미덕을 갖는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들이란, 개인의 특권 축소에도 가치를 부여하고, 또 어떤 사회 그룹이나 계급이 여타 다른 그룹이나 계급에 균림할 여건을 축소시키는 데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여할 줄 아는 시민들을 의미한다.

부패행위, 권력남용 혹은 정의의 결핍이 단지 공무원이나 판사, 정치인들의 문제로만 비춰져서는 안 된다. 그 문제들은 도덕성 —도덕적인 인간을 언급하는

것이자, 자기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그 무엇—의 타락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타인을 고려하여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는, 윤리적 인간이 갖고 있는 윤리성의 패턴과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개인의 성격이나 제도의 힘에 관련되어 있다기보다는 개인 간의 삶과 사회조직에 훨씬 더 많이 관계되어 있다.

최소한 이제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협약은 이러한 부분에서 아무런 반향을 불러 모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협약 자체도 더 진전된 것이 없었다. 의도는 좋았지만 근본적으로 공화국의 현 상태와 시민들의 무관심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로만 작용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과 대의제도권이 잘 가동되어 다수를 만족시키고 성과를 낸다면, 그리고 견고한 반부패 방어막을 쌓아올린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V. 딜레마와 도전

현 위기에는 폭발물에 가까운 요소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상식과 정치적 현명함에 바탕을 둔 어떤 반응이 당장 내일 일어난다고 해도 믿어버릴 정도로 토론의 수준이 아주 낮아져버렸다. 어쨌든 지금은 배가 처져 없이 떠돌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또, 이 나라가 자발적인 이니셔티브와 현명함, 창의력까지 모두 다 소진했다고도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제일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 주 연료는 지도의 다른 쪽에 있다. 위기는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현 정치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이 극에 달한 상황과 일치한다. 현 사회는 적극적인 정치체계가 없이도 잘 생존할 수 있다고 믿는다. 현재의 시스템을 보노라면, 그 시스템이 작동할 때마다 오히려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고 문제를 야기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또한,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라도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국가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존재하여 국민들에게,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몇몇 기본적인 치안과 건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민들은 그나마 삶이 나아졌다고 믿을 것이다.

현재 이러한 정서가 위협스럽게 사회로 퍼져나가고 있다. 여기서 ‘위험스럽다’고 한 것은 그와 같은 정서가 사람들로 하여금 일관성이 덜한 삶, 결속력이 떨어진 삶 그리고 (사회나 정치제도가 아닌 -역주) 각자의 노력과 이니셔티브에 더 의존하는 삶을 살도록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삶은 평등을 낳을

능력도, 모든 이에게 권리를 보장할 능력도 없다. 또한, 그러한 삶은 정반대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론(異論)도 제기하지 못하고, 견고한 입장도 유지하지 못하는 이른바 ‘합리적’ 행정 논리에 지배를 당한다. 그러한 삶에는 ‘통치가능성’만 있을 뿐,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사회가 정치로부터 정말 멀어지게 이룬다면 —즉, 정치가 국민과 여론과의 긍정적인 대화 재개를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하늘엔 먹구름만 예상될 것이다. 요약하면, 현재의 위기는 정치와 사회 사이의 거리가 전례 없이 먼 것과 상통한다. 그 거리는 이별과 분열로 이어질 상황에 있다. 브라질리아에서 반짝거리고 있는 빨간 경고 신호등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얼핏 보이는 장면이 이성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듯이, 또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추해질 수도 있지만 돈을 찢어버리거나 표발을 포기하지도 않듯이, 살아있는 육신이 산소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이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와 정치 시스템을 필요로 하듯이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사이의 보다 효율적인 만남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는 가정을 해볼 수도 있다. 이러한 가정의 저편에는 그러한 변화의 주역들 혹은 주체들, 즉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온다. 비록 그것이 명백한 시간의 문제이자 숙성의 문제요, 객관적인 여건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런 주역들이 등장하는 것 역시 정치적 의지의 문제이자, 결심의 문제요, 존재론적인 관심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현 사회가 겪고 있는, 빠르고 액체 같은 현 시대에서는 보기도 드물고 해결하기도 어려운 요소들의 문제이다.

하지만 정확히 그러한 고속의 액체 같은 시대에서도 무(無)에서 놀라운 연합과 움직임이 탄생하듯이 무대의 막을 열어젖히며 시대의 주역이 등장할 수도 있다. 어쨌든 그 시대 역시, 혼자 외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나 아니면 새롭고 보다 조화로운 팀을 꾸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 집단까지 필요로 하는, 적극적이고도 정보화된 개인들이 상호 연결된 시대이다.

참고문헌

- Bauman, Z. (2001), *Modernidade Líquida*, Tradução de Plínio Dentzien, Rio de Janeiro: Jorge Zahar Editor.
- Beck, U. (1999), *O que é Globalização? Equívocos do Globalismo, Resposta à Globalização*. Tradução de André Carone, São Paulo: Paz e Terra.
- Bobbio, N. (2000), *O Futuro da Democracia*, Tradução de Marco Aurélio Nogueira. Sétima edição revista e ampliada, São Paulo: Paz e Terra.
- Castells, M. (1999), *A Sociedade em Rede*, Tradução de Roneide Venâncio Majer, São Paulo: Paz e Terra.
- Falk, R. (2002), *La Globalización Depredadora*. Una crítica, Buenos Aires: Siglo XXI.
- Giddens, A. (1991), *As Conseqüências da Modernidade*, Tradução de Raul Fiker, São Paulo: Editora UNESP.
- Manin, B. (1996), *Principes du Gouvernement Représentatif*, Paris: Flammarion.
- Nogueira, M. A. (2001), *Em Defesa da Política*, São Paulo: Editora Senac.
- Nogueira, M. A. (2004), *Um Estado para a Sociedade Civil. Temas Éticos e Políticos da Gestão Democrática*, São Paulo: Cortez.
- Nogueira, M. A. (2005), ‘O Parlamento Sitiado, a Ciência e a Educação,’ In Máira Baumgarten (org.), *Conhecimentos e Redes, Sociedade, Política e Inovação*, Porto Alegre: Editora UFRGS, 2005, pp. 173—188.
- Werneck Vianna, L. (2009), ‘Corações Partidos,’ Entrevista publicada em *O Estado de São Paulo*, Caderno Aliás, 23 de agosto.